
키르츠네르주의의 유산과 마크리주의의 도전: 아르헨티나 우파로의 전환과 향후 전망

손혜현

국립외교원 객원교수

핵심어: 키르츠네르, 마크리, 사회정의당, 페론당, 공화주의제안당, 좌파정권, 우파정권, 경제위기,
아르헨티나, 중남미, 라틴아메리카

I. 들어가며

2015년 12월 10일 선거연합 ‘바꾸자’(Cambiemos)의 마우리시오 마크리가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지난 12년(2003년~2015년) 동안 아르헨티나 정치를 지배하던 키르츠네르주의(Kirchnerismo)가 막을 내렸다. 마크리의 당선은 정권교체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초로 제3의 정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점에서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페론주의가 정치무대에 등장한 이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사회정

의당(PJ: Partido Justicialista)¹⁾과 급진시민연합(UCR: Unión Cívica Radical) 이외의 어떤 정당도 정권창출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사회정의당 이외의 어떠한 정당 출신 대통령도 법정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²⁾ 따라서 마크리 신정부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은 개혁의 성공 여부보다도 정권의 생존 가능성에 집중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마크리 정부는 짧게는 지난 12년, 길게는 70년간 아르헨티나 사회를 지배하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유산과 싸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바꾸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출발한, 우파 성향의 마크리 정부가 과연 개혁에 성공하고 안정적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키르츠네르주의가 남긴 지난 12년간의 유산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비록 여당이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가 여당 후보였다는 점과 결선투표에서 불과 2.8%포인트의 차이로 마크리에게 패배했다.³⁾ 결국 아르헨티나 유권자는 경제침체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개혁과 변화를 주장하는 마크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3년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있으며, 30%~40%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크리가 주장하는 경제정책과 제

1) 흔히 페론당이라고도 부른다.

2) 1983년 민주화 이후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은 급진시민연합의 라울 알폰신(Raúl Alfonsín), 야당연합을 형성한 데 라 루아(De la Rúa), 사회정의당 출신의 카를로스 메넴(Carlos Menem), 네스토르 키르츠네르(Néstor Kirchner),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이다. 이 가운데 급진시민연합의 알폰신 대통령은 임기만료 6개월 전에, 데 라 루아 대통령은 임기만료 2년 전에 사임했다.

3)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1차 투표로 당선이 확정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1위 후보의 득표율이 45%를 넘을 경우, 둘째 1위 후보가 40% 이상을 득표하고 2위와의 격차를 10%포인트 이상으로 벌릴 경우이다. 두 경우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2015년 대선을 보면, 1차 투표에서 여당 후보 시울리는 37.1%, 마크리는 34.1%를 획득했기 때문에 결선투표로 넘어갔다. 결선투표에서는 51.4%를 획득한 마크리가 48.6%를 득표한 시울리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도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선거결과가 보여주듯이 키르츠네르주의는 여전히 굳건한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위한 전선’(FPV: Frente para la Victoria)에서⁴⁾ ‘바꾸자’로 이동한 표는 높은 조세 부담, 규제강화, 부패 그리고 정부의 지표 조작 등으로 인한 투명성 부재에 실망한 소수의 중산층 유권자이었다. 이들은 마크리 정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키르츠네르주의로 복귀할 수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부는 50%가 넘는 지지율을 유지했다. 민주주의로 복귀한 1983년 이후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정부(2003년~2007년)를 제외한 어떤 정권도 이처럼 높은 지지율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한 마크리 정부의 향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키르츠네르주의 12년이 아르헨티나 사회에 남긴 유산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II. 개념 정의 및 특징

1) 키르츠네르주의

키르츠네르주의는 2003년 키르츠네르 대통령이 만든 페론주의 성향의 정치 운동이며,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정부(2003~2007)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부(2007~2015)에서 구체화된 이념적 경향이다. 따라서 어떤 선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표현되었다기보다는 지난 12년간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정부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특징과 내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4) 승리를 위한 전선은 2003년에 결성된 선거연합정당이다. 사회정의당이 주축이며, 급진시민연합 등 아르헨티나의 여러 정파가 참여하고 있다.

키르츠네르주의는 페론주의 정치운동의 한 분파로서 발전하였다. 키르츠네르 대통령 부부가 페론주의에 참여한 시점은 페론주의가 극심한 탄압을 받던 1970년대 군부독재 시기였다. 두 사람은 급진적이고 공격적인 청년 사회정의당 당원으로 비밀리에 활동했다. 70년대의 청년 페론주의자에게 페론주의는 ‘잃어버린 낙원’이었다. 따라서 키르츠네르주의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파탄에 몰린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낙원으로 복귀’하자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아르헨티나의 소외 계층은 키르츠네르주의를 사회변혁운동으로 인식했다.

키르츠네르주의는 페론주의 성향의 정치운동이지만 사회정의당과는 달랐다. 네스토르 키르츠네르는 사회정의당을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정치적 행위자라기보다는 오직 선거 승리가 목적인 거대한 조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을 뛰어넘는 동일한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승리를 위한 전선’(Frente para la Victoria)이라는 정당을 결성했다. 따라서 키르츠네르주의는 사회정의당과 비교하여 이념적으로나 조직적으로 훨씬 더 유연하다는 특징이 있다.

키르츠네르주의는 부의 재분배와 사회 통합을 동반한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다. 인프라 건설, 노조활동 강화, 재분배 정책 재개, 연금과 자녀수당 확대, 최저임금 인상, 방대한 사회복지 등 공공부문 확대 정책은 생산 활동과 고용을 촉진하여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키르츠네르주의는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받던 국가의 역할을 재고했다. 아르헨티나항공과 국영석유회사(YPF) 그리고 연금의 재국영화 조치가 대표적인 예다. 국가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는 공공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2003년 GDP의 20.56%이던 공공지출은 2014년 43.95%로 증가했다.⁵⁾ 특히 에너

5) <http://www.datosmacro.com/estado/gasto/argentina>

지 및 교통요금 보조, 공기업 적자 보전, 사회보장 확대, 그리고 국내산업 지원으로 인한 공공지출이 두드러졌다.⁶⁾

키르츠네르주의는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네스토르 키르츠네르가 집권한 시기로 가장 성공적인 성장, 사회통합 그리고 개혁의 성과를 이루었다. 연간 8~9%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사회적 분배도 개선했다. 또한 정치적 기반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페론주의 내 조직 기반을 확고하게 다졌다.

키르츠네르주의 2기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키르츠네르가 집권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다.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츠네르의 후광으로 큰 어려움 없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극심한 국내외 정치·경제적 위기로 그동안 키르츠네르주의의 성장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집권 초기인 2008년 초부터 심각한 재정문제에 봉착했고 인플레이션은 매우 심각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사회는 분열되었고, 2009년 의회선거에서 여당은 크게 패했다. 2010년~2011년 일시적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연 8%대의 성장을 달성했으나 거시경제 안정화에는 실패했다.

제3기는 재선에 성공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의 두 번째 임기다(2011년~2015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는 기존의 페론주의 지지층과 중산층의 표를 확보함으로써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첫 번째 임기 말의 단기적인 경제회복, 사회복지정책, 국내산업 보호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야당의 분열 덕분이었다. 그러나 재집권 직후인 2011년부터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졌다.

6) 2006년 GDP의 1%였던 각종 보조금 지출은 2014년 5.1%로 증가했다. 이 중에서 에너지와 교통요금 보조금이 92%를 차지했다(http://www.ieco.clarin.com/economia/evolucion-efectos-gasto-publico-Argentina_0_1459654254.html).

2) 마크리주의(Macrismo)

마크리주의는 정치에서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는 마우리시오 마크리의 자유주의적 보수주의 정치철학을 의미한다. 신정부 내각 구성에서 보듯이, 마크리주의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친기업가 정부이다. 일부 언론에서 신정부를 ‘CEO주의’로⁷⁾ 명명할 정도로, 전직 국내외 기업대표를 대거 중앙부처와 공기업의 핵심 관료로 임명했다.⁸⁾

아르헨티나의 우파는 크게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로 구분된다. 자유주의자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하고 국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여 작고 효율적인 국가를 희망한다. 보수주의자는 지주와 기업 엘리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도구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당을 이익대변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는 전통적인 우파 정당이 부재했다. 따라서 마크리주의의 등장은 우파 정당이 부재한 아르헨티나 정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정당의 약화 또는 해체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0년대 초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마크리주의의 정치적 기반이 된 공화주의제안당(PRO: Propuesta Republicana)⁹⁾

7) “La CEOcracia”, Página 12, 2015년 12월 6일.

8) 대표적인 마크리 신정부의 CEO출신 각료들은 GE출신의 이셀라 코스탄티니(Isela Costantini) 아르헨티나 국영항공사의 대표, IBM과 아르헨티나 Telecom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비서 출신의 수사나 말코라(Susana Malcorra) 외교부 장관, 쉘 출신의 후안 호세 아랑구렌(Juan José Aranguren) 에너지광업부 장관, 란항공 출신의 구스타보 로페테기(Gustavo Lopetegui) 부총리, 독일은행출신의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금융청장, JP모건 출신의 아돌포 프라트 가이(Adolfo Prat Gay) 재정부 장관, 아르헨티나 농업연합 출신의 리카르도 브루야일레(Ricardo Bruyaille) 농산업부 장관, 페가수스재단(Farmacity, Freddo, Musimundo 회사를 소유) 출신의 마리오 키타나(Mario Quintana) 경제부처조정 장관 등이 있다.

9) 공화주의제안당의 전신은 2003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선거 후보로 마크리를 추대하기 위해 사회정의당(Partido Justicialista), 연방당(Federal), 자치당(Autonomista), 민주당(Demócrata), 공화주의행동당(Acción por la República), 진보민주당이 연합하여 만든 ‘변화를 위한 약속 전선’(Frente Compromiso para el Cambio)이며, 2005년 ‘변화를 위한 약속’(Compromiso para el Cambio)이라는 당명으로 공식 창당했다. 이 당은 2008년 공화주의제안당으로 개명했다.

은 사회정의당과 급진시민연합과 같은 전통 정당이 정치적 영향력을 잃어가는 시점에 기존 제도와 정치 방식에 대한 도전으로 등장했다. 마크리의 정치활동은, 카를로스 메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옹호하던 알바로 알소가리가 만든 싱크탱크에 참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신뢰와 성장 재단’¹⁰⁾은 마크리를 가장 이상적인 2003년 대선 후보자로 지목했다. 당시 마크리는 마크리주식회사(SOCMA: Sociedad Macri)의 후계자이자 프로축구 보카 주니어스의 구단주로, 성공적인 기업가의 이미지와 함께 대중적으로도 호감을 사던 인물이었다. 사회정의당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었던 ‘신뢰와 성장 재단’ 지도부는 마크리를 2003년 대선의 여당 후보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마크리는 페론주의자와 결별하고 독자 노선을 택했다.

마크리는 ‘변화를 위한 약속 전선’을 결성하여 2003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선거에 출마했다. 아르헨티나 전체인구의 약 40%(약 1천3백만)가 밀집된 지역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다. 당시 2001년 8월 총선거에서 일명 ‘투표소동’이라 부르는 무더기 무효표가 나왔고, 2001년 12월부터는 기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 ‘모두 물러나라’(Que se vayan todos!)라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게다가 당시 급진시민연합과 국가연대전선(Frepaso)의 데 라 루아 연합 정부는 극도로 약화된 상황이었다. 사회정의당의 사정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 1995년 메넴 정부 2기부터 사회정의당 지지율이 하락했고, 사회정의당 지도부는 여러 개의 계파로 분열되었다. 마크리는 기존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사회의 불신과 반감을 공화주의제안당의 세력 확장에 이용했다.

10) 신뢰와 성장 재단(Fundación Creer y Crecer)은 카를로스 메넴 지지자인 기업인 프란시스코 나르바에스(Francisco Narvárez)가 설립했다.

2002년의 정치적 상황은 마크리의 정치세력화에 있어서 분명히 유리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정치문화에서 아웃사이드에 불과한 제3정당이 세력을 확장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2003년 부에노스아이레스시장 선거에서 마크리는 2차 투표에서 사회정의당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후 마크리는 선거의 실패의 원인을 조직의 부재에서 찾고, 2005년 부에노스아이레스시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를 기반으로 ‘변화를 위한 약속’을 공식적으로 창당하고 지지 기반을 조직화했다. 2005년 의회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약속’은 마크리(부에노스아이레스시)를 포함하여 하원에서 9석을 확보했다.

유세기간에 사용한 당의 약자 표기인 프로(PRO)는 진취성, 적극성, 전문성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당의 상징색인 노란색은 ‘놀이’를 상징하여 무겁고 부정적인 정당 활동을 파티와 놀이의 이미지로 바꾸었다. 공화주의제안당은 시민사회와 조직적으로 연계하여 당원을 확보했으며, 독특한 자원동원 방식과 정치 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공화주의제안당만의 고유한 정당정치 방식을 만들었다. 이미지와 가치를 통한 상징적이고 도덕적인 자원동원 방식은 정당과 당원 그리고 유권자 간의 공통된 소통과 해석의 언어가 되었다. 예를 들어, 자발적 참여와 봉사에 대한 가치 그리고 제스처와 성공(긍정적 가치)의 언어를 통해 공화주의제안당은 유권자에게 호소했다. 성과와 목적 달성을 칭찬하고 보상하는 기업가적인 정당 의례, 자발적 참여와 봉사를 강조하는 도덕적 가치평가, 긍정적인 사고방식, 정당을 상징하는 노란색 풍선과 형형색색의 깃발, 음악과 댄스 변장 등을 통한 축제의 분위기 조성 등은 전통 정당의 후견주의 방식과는 매우 다른 참신한 정당정치 방식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정당정치는 공화주의제안당을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른 우파 정당보다는 실용주의와 진보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탈이념적 정당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2007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선거에 재도전한 마크리는 60.96%라는 높은

지지율로 승리하고, 2008년 당명을 ‘공화주의제안당’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공화주의제안당은 태생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정치집단이었다. 공화주의제안당의 지도부는 이념적 유사성과 근접성 그리고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전통 우파 정당, 사회정의당, 급진시민연합, 기업가 집단, 싱크탱크와 NGO 출신의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마크리는 이들 다양한 부문을 기업가적 리더십과 신생정당이 가진 기회를 통해서 통합했다. 당내 마크리의 리더십은 확고했고, 당내 파벌은 선거에서 표 동원능력 순으로 배열되었다.

그뿐 아니라 공화주의제안당이 기존 정당과 차별되는 특징은 젊은 활동가의 충원 능력에 있었다. 싱크탱크 및 NGO 출신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는 젊은 정치 지망생에게 전문가와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고, 자원봉사에서 시작하여 직업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젊은이들이 정계에서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성 정당에서 30~40년이 걸려도 어려운 의회 진출이 단기간에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2009년 의회 선거에서 사회정의당 파벌과의 선거연합이 성공함으로써 공화주의제안당 후보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선거에서 여당 후보에게 승리했고, 마크리는 2011년 부에노스아이레스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2011년과 2013년 의회 선거에서는 키르츠네르주의의 부진으로 마크리주의가 새로운 정치적 대안으로 부상했다.

2015년 10월 25일과 11월 22일 차례로 시행한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와 결선투표에 약 2천 6백만명의 아르헨티나인이 참가했다. 이번 선거는 1994년 아르헨티나 결선투표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결선투표에서 당선자가 결정되는 선거였다. 이번 선거에서 마크리는 총 24개 선거구 가운데 8개의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얻었다. 주로 도시 유권자의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특히 유권자가 가장 많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와 아르헨티나 제2의 도시인 코르도바 시에서 압도적

으로 높은 지지율을 획득했다. 1차 선거에서 마크리는 33.3%을 얻어 36.1%를 얻은 여당 후보 다니엘 시올리(Daniel Scioli)에게 패배했으나,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결선투표로 넘어갔다. 결선투표에서 마크리는 51.4%를 얻어 다니엘 시올리를 2.8%포인트의 표차로 따돌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표1〉 2015년 대통령선거 결과

1차 투표(2015년 10월 25일)		
후보자	정당	득표율
다니엘 시올리	승리를 위한 전선(FPV)	36.1%
마우리시오 마크리	바꾸자(Cambios)	33.3%
세르히오 마사	새로운 대안을 위한 연합 (Unidos para una Nueva Alternativa)	20.8%
결선투표(2015년 11월 22일)		
후보자	정당	득표율
마우리시오 마크리	바꾸자(Cambios)	51.4%
다니엘 시올리	승리를 위한 전선(FPV)	48.6%

결선투표에서 마크리는 근소한 표차로 승리했다. 이번 선거결과에서 페론주의는 여전히 아르헨티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임이 입증되었으며, 향후 마크리 정부의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공약으로 내건 마크리의 전략은 유권자의 표를 공략하는 데 성공적이었다.

III. 키르츠네르주의의 성과

1) 사회 지표의 개선

키르츠네르주의 12년은 아르헨티나 사회에 중요한 유산을 남겼으며, 무엇보다도 부의 사회적 재분배를 통한 사회 지표의 개선은 가장 긍정적인 유산이다. 경제파탄의 위기에서 경제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한 키르츠네르 정부는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중국 경제성장의 효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8~9%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외채협상을 통해 원금의 75%를 탕감받았고, 2007년에는 IMF차관 98억 달러 전액을 조기 상환했다. 이후 금융비용 절감으로 생긴 여유 재정을 사회복지기금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확대에 사용했다.

아르헨티나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에 아르헨티나의 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21.5%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무려 3백만 명을 넘었고, 전체 노동자의 12.7%가 비정규직이었다.¹¹⁾ 그러나 2002년부터 실업률은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9%로 하락했고, 2014년에는 6.9%를 기록했다.¹²⁾

키르츠네르주의 내내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1993년 메넴 신자유주의 정부는 최저임금을 200페소로 동결함으로써 물가인상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2002년 태환정책의 포기로 페소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면서 실질임금은

11) La Nación, 2002년 7월 26일(<http://www.lanacion.com.ar/416934-desempleo-record-mas-de-3-millones-sin-trabajo>)

12) 아르헨티나통계청의 지표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조작되었다고 비판한다. 민간조사기관인 엠피리아(Empiria)는 2014년 실업률을 10.6%라고 발표했다(“desempleo en la Argentina está entre los más altos de la región”, *Clarín*, 8 de Febrero de 2015). 참고: http://www.indec.mecon.ar/nuevaweb/cuadros/4/empleo_cambios03-08.pdf 및 http://www.indec.mecon.ar/nivel4_default.asp?id_tema_1=4&id_tema_2=31&id_tema_3=58

약 30%나 하락했고, 임금노동자의 생활은 평가절하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더욱 빈곤해졌다. 그 결과, 중산층이 붕괴하고 임금노동자가 새로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당시 빈곤율은 45%에 달했다.

2003년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정부는 노동자 한 명이 인간으로서 최소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교육, 의료, 교통, 휴양, 휴가, 연금에 대한 기본 보장을 강조하는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을 설정했다. 그 결과 2003년 200페소(200달러)에 불과하던 최저임금은 연간 평균 10%씩 상승하여 2015년에는 5,588페소(370달러)가 되었다(〈그림1〉 참고).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추진한, 44만 개에 달하는 생필품에 대한 가격관리 정책은 저소득층과 빈곤계층에게 실질임금 인상의 효과를 가져와 2003년 45.8%였던 빈곤율이 2014년에는 16.1%로 감소했고, 극빈층 역시 2003년 19.4%에서 2014년 5.1%로 대폭 감소했다(〈그림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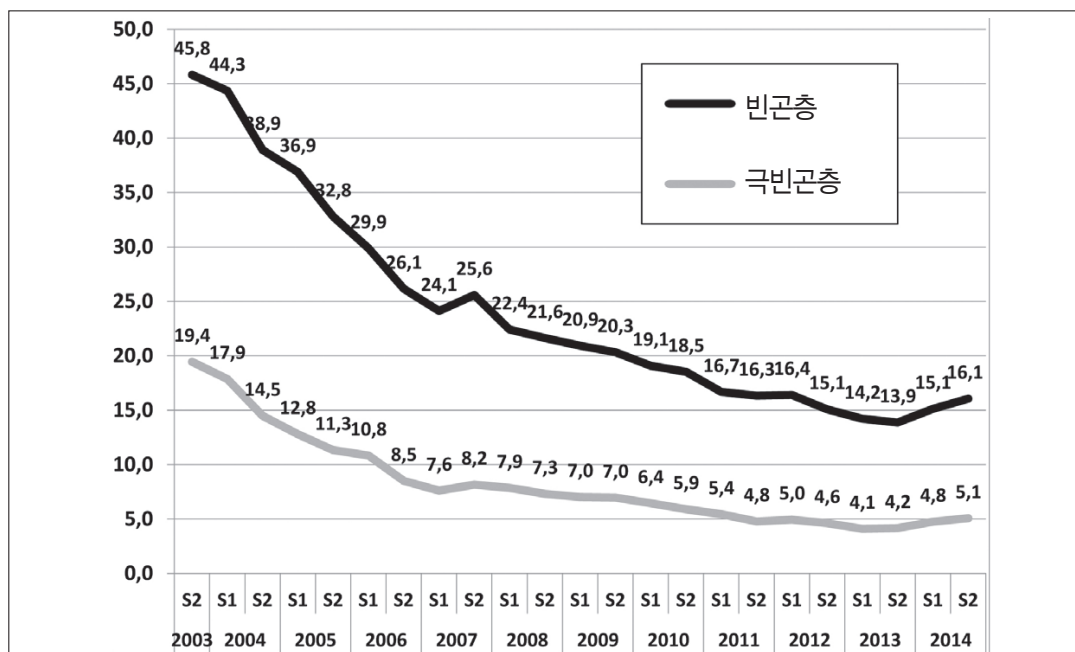
〈그림1〉 아르헨티나 최저임금 변화(1993-2015)



출처: www.LaTDF.com.ar

부의 재분배가 개선되면서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지고 중산층이 두꺼워졌다. 2002년 전체 인구의 15% 불과했던 중산층의 비율이 2015년에는 30.2%로 증가했고, 2015년에는 중간층의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표2〉 참고).¹³⁾ 세계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지난 10년간 라틴아메리카에서 중산층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국가이다.¹⁴⁾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파괴된 중산층은 고용의 증대, 노조 활성화, 기초연금 확대, 최소임금인상률 제도화, 공공요금 동결 그리고 에너지 보조금 덕분에 실질소득이 늘어나면서 중산층의 지위를 회복했고, 소득 증가로 사회적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하층계급이 중산층으로 상승했다.

〈그림2〉 아르헨티나 빈곤율 변화(2003-2014)



출처: CESO(http://www.ceso.com.ar/sites/default/files/informe_economico_especial_-_abril_2015_1.pdf)

13) <http://artepolitica.com/comunidad/la-herencia-k-memoria-y-balance-final-2003-2015/>

14) www.bancomundial.org/es/news/press-release/2012/11/13/argentina-middle-class-grows-50-percent

〈표2〉 2015년 대통령선거 결과

사회경제적계층	2002년(명)	2015년(명)	차이(명)
상층	1,820,000(5%)	2,167,500(5.1%)	+347,500
중상층	3,630,000(10%)	7,650,000(18%)	+4,020,000
중간층	5,435,000(15%)	12,835,000(30.2%)	+7,400,000
중하층	7,245,000(20%)	13,600,000(32%)	+6,355,000
하층	18,130,000(50%)	6,247,500(14.7%)	-11,882,500
계	36,260,000(100%)	42,500,000(100%)	+6,240,000

출처: consultora W. <http://coviart.com.ar/wp-content/uploads/2015/08/poblacion-argentina-y-clase-media.jpg>

2) 제조업 확대

소득의 증가로 내수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그 결과 국내 산업이 촉진되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아르헨티나의 제조업은 1970년대 초반 이후 가장 크게 성장했다. 2000년대 아르헨티나의 중소기업의 숫자는 약 50% 증가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8%를 차지하고, 전체 생산의 45%를 담당하며 전체 고용의 약 50%를 차지한다. 생산과 고용에서 각각 9%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자동차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국내 자동차시장이 활성화되었다. 당시 주식시장에 상장된 제조업체의 수는 5년 만에 30% 이상 증가했고 산업능력도 40%가 향상되었다.

3) 사회적 지원확대

2009년 자녀의 취학을 조건으로 빈민가정을 지원하는 자녀수당제도가 신설되었다. 실업자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자녀에게 40~50달러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총 188만 가정의 340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고 있

다.¹⁵⁾ 또 다른 복지제도로 실업 가장을 지원하는 가족수당제도를 시행했다. 사회 복지 지원금은 키르츠네르주의 12년간 물가인상률과 연동하여 인상되었다. 그 밖에도 주택문제를 해결을 위한 주택건설프로그램(PFCV)과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했다.

4) 인권과 사회적 권리의 확대

2003년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정부는, 군부독재 시절에 제정된 사면법과 명령 복종법을 폐기하고, 2007년에는 ‘추악한 전쟁’의 인권탄압 가해자에 대한 재판과 처벌을 재개했다. 법과 사회연구센터(CELS)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판이 재개로 총 2,626명의 인권탄압 사범이 기소되었다. 2014년 말까지, 이들 중 51명은 사면되고, 526명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속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08년에는 인권 유린의 최고책임자인 라파엘 비델라 장군과 루시아노 벤사민 장군이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었다.¹⁶⁾ 이들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 재개는 아르헨티나 사회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피의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도 시행했다. 정부는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오월광장 어머니회’와 ‘오월광장 할머니회’의 실종자 자녀 찾기 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강제 입양 또는 납치된 117명이 친부모의 가족을 찾았다. 2014년 오월광장 할머니회 회장인 에스텔라 데 카를로토가 2014년 친손자를 찾은 사건은 이 프로그램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15) 자녀수당은 다른 수당을 받더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한 가정에 자녀 한 명당 약 50달러씩 최대 5명까지 지급한다. 수령 시 예방접종증명서와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 하며, 5세 이상의 자녀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6) 아르헨티나의 현행법상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징역대신 가택연금형이 부과된다(BBC News. 11 October, 2008. <http://news.bbc.co.uk/2/hi/americas/7664876.stm>)

그뿐 아니라 11월 7일을 ‘진실과 정의를 위한 기억의 날’로 정하고, 군부독재의 참혹성을 알리기 위해 인권유린이 자행된 육군공병학교 자리에 ‘기억의 공간과 인권’이라는 박물관을 설립했으며, 고문 희생자의 시신을 비행기에 실어 내다 버린 리오 델 라 플라타 강 근처에는 희생자를 위한 추모공원을 조성했다.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보장도 제도화했다. 국내적으로 많은 논란과 교회를 비롯한 보수단체의 저항이 컸던 정책으로, 2010년에 제정된 동성결혼이 있다.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최초로 그리고 세계에서는 열 번째로 동성결혼이 제도화된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성 정체성 법을 제정하여 성전환자와 양성자는 신분증의 이름과 성별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보완하여 2013년에는 아동노동 처벌법을 제정했고, 비정규직 가사 도우미의 정규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5) 역내 지역통합 강화

키르츠네르 정부의 외교정책의 핵심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와의 협력과 통합을 우선시하는 지역통합정책에 있었다. 키르츠네르는 남미국가연합(UNASUR) 창설을 주도했고,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또 IMF를 대체할 수 있는 역내 금융기관으로 남미은행을 창설했다.

아르헨티나로 이주를 희망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국가의 국민에게 영주권을 주는 ‘큰 조국’(Patria Grande) 정책을 시행했다. 그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학생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교와 대도시의 국립 또는 공립대학교를 개방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관계가 긴밀해질수록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키

르츠네르주의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ALCA) 창설에 강력히 반대했으며, 미국이 견제하는 이란, 러시아,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외정책이 아르헨티나를 국제정치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역내 국가, 특히 브라질과의 우호관계 강화와 말비나스 제도(일명, 포클랜드 제도) 주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는 대외정책의 성공으로 평가받았다.

III. 마크리주의의 과제

1) 물가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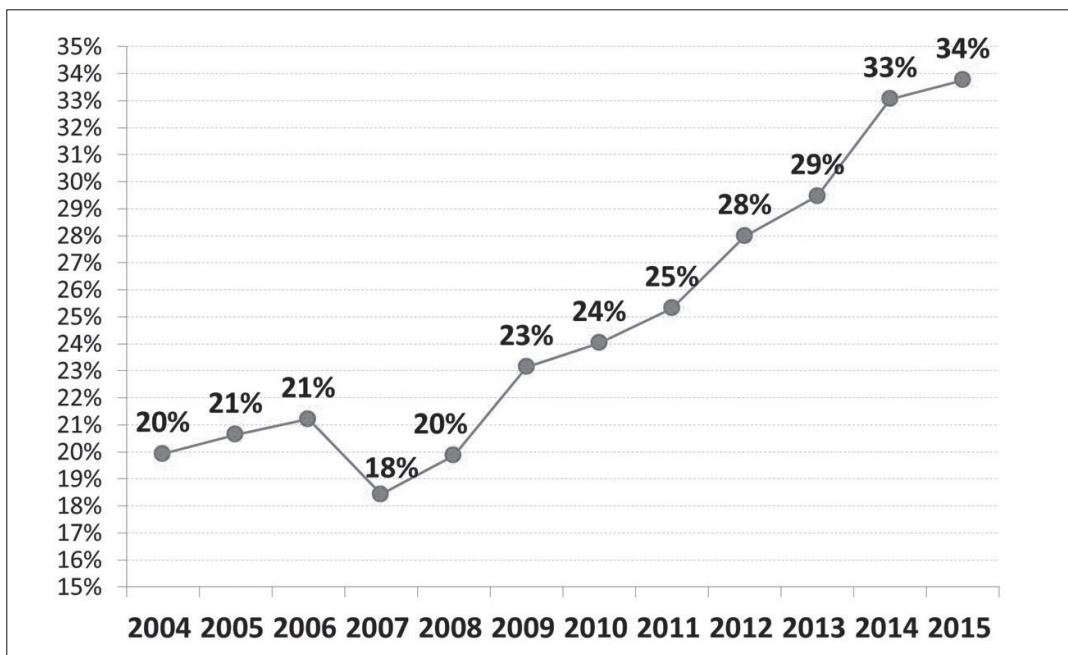
2015년 대선의 화두는 무엇보다도 경제문제였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저소득층과 중간층의 실질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빈곤율이 다시 높아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안이 악화되었다. 아르헨티나 디지털 일간지 『인포바에』(Infobae)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많은 식료품의 가격이 2003년에서 2015년 사이에 1,000% 이상 상승했고, 주식인 소고기와 마테 차의 경우는 2,000% 가까이 상승했다.¹⁷⁾ 일부 정통주의 경제전문가는 이러한 물가인상의 원인이 증가하는 공공지출(경제 지원금과 3,000% 이상의 최소임금 인상)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무분별하게 발행한 화폐가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키르츠네르주의 정부는 물가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부 생필품에 대해 가격을 통제

17) “Doce años de inflación: algunos productos subieron más de 1.000% en los súper”(http://www.infobae.com/2015/09/09/1753820-doce-anos-inflacion-algunos-productos-subieron-mas-1000-los-super)

했다(관리가격). 그러나 수요 증가로 인한 재고부족, 생산업자의 생산 거부 등으로 인해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민간통계조사기관이 조사한 2015년 아르헨티나의 물가인상률은 약 40%에 달했다.

마크리주의 정부는 2016년에는 물가인상률을 25%로 유지하고, 2017년에는 17% 끌어내려 2018년~2019년에는 한 자리 숫자로 안정시키겠다고 발표했으나 올 3월 조사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벌써 37%나 올랐다. 물가상승 유발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은 늘어난 공공지출에 있다.(<그림3>). 따라서 마크리 정부의 물가정책의 주요 골자는 공공지출 축소에 있다. 그러나 공공지출을 줄이면 간접적인 소득원(각종 지원금)의 감소로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순적인 조치이다.

〈그림3〉 공공지출 변화 추이(2004-2015)



출처: IDESA, <http://www.idesa.org/informes/1288>

현재 페소의 평가절하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노동자와 연금생활자는 임금과 연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임금인상률을 20~25%로 동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만연한 상황에서 노동자는 35% 이상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노조와의 타협이 결렬될 경우 노조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 물가-임금이 연동된 상황에서 임금인상은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실질임금의 감소는 사회적 불안을 초래함으로 인플레이션 극복은 마크리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현재 GDP의 7%에 달하는 방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빌려가는 자금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지급하던 각종 지원금을 축소하는 수밖에 없고, 이는 실질임금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저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던 양적완화정책이 통화량을 증가시켜 지속적인 물가인상을 초래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을 통해 저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비록 마크리 정부가 홀드아웃(holdout) 채권자에게 외채를 갚고 디폴트에서 빠져나옴으로써 국제신용시장 접근이 용이해졌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재정적자 때문에 물가상승은 당분간 불가피하며, 긴축정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에 지출하던 보조금을 삭감하고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¹⁸⁾ 아마도 이는 가장 어려운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공공요금인상은 물가상승으로

18) 각종 보조금 지원은 재정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마크리 정부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교통, 수도, 가스, 전기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요금을 인상했다. 인상율은 평균 250%이다. 구체적으로,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00%-500% 인상,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최고 900%, 가스 요금은 평균 300% 인상되었다(La Nación, 2015. 3. 30. <http://www.lanacion.com.ar/1884276-suben-desde-abril-las-tarifas-de-agua-y-los-boletos-de-colectivos-y-trenes>).

이어지고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하게 되므로 사회적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서 정부는 GDP의 1.5%에 달하는 40억 달러를 절약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떠안게 되었다.

최근 조사된 빈곤율은 2015년 29%에서 마크리 정권 출범 이후 34.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⁹⁾ 마크리 정부는 이전 정부의 유산을 정리하고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며, 올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물가인상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는 가장 큰 사회적 불만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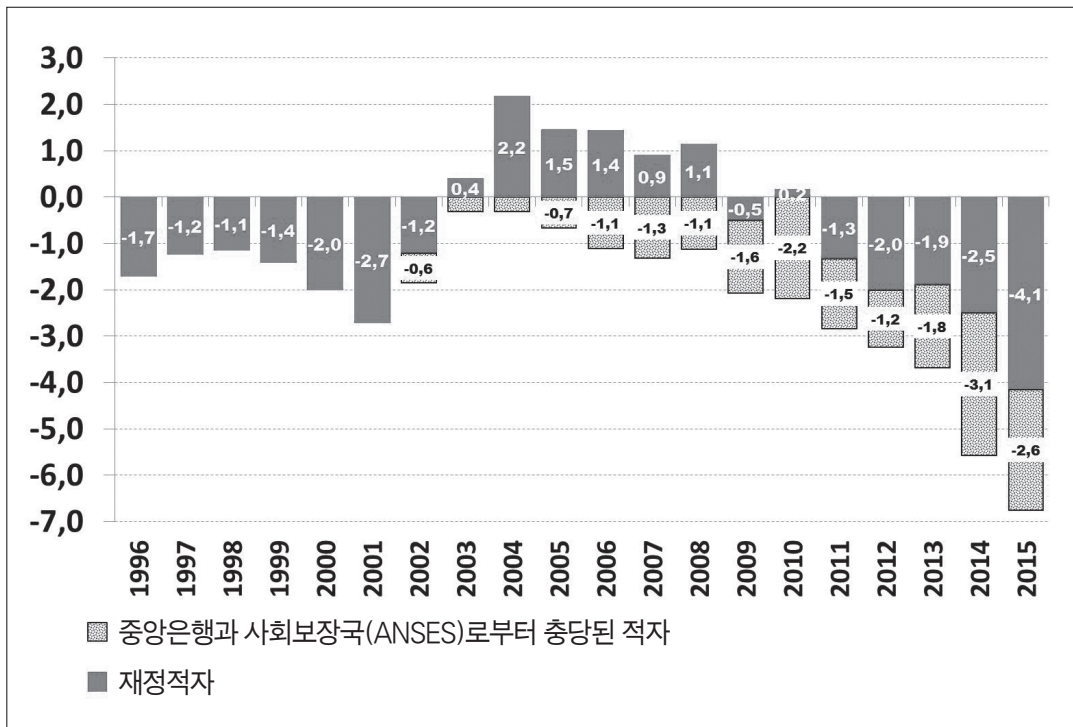
2) 재정적자

키르츠네르주의 12년이 남겨놓은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공공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였다. 키르츠네르주의 1기(2003~2007)에 정부 계정은 흑자를 유지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출은 2003년 GDP 대비 23.46%에서 2015년 43.95%로 증가했다. 재정지출은 주로 복지, 공기업적자 보전을 위한 보조금, 공무원 임금 그리고 공공요금 동결을 위해 민간기업에 지원한 보조금 등에 집중됐다. 앞서 언급한 지출은 2004년~2014년에 52% 증가했으며, 대부분 장기계약에 연동돼 있거나 경직적인 고용시장과 연계되어 있어 정부정책을 통해 손쉽게 조정할 수 있는 지출이 아니다. 한편 늘어나는 지출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조세부담률을 2004년 GDP의 18%에서 2014년 26.7%로 늘렸다.²⁰⁾ 그 결과 2015년 아르헨티나

19) http://bbc.com/mundo/noticias/2016/04/160405_economia_argentina_mauricio_macri_aumentos_precios_ms

20) 윤예찬, “아르헨티나 경제의 Not-So-Holy Trinity (1): 재정적자”(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35813&ARTICLE_SE=20301).

〈그림4〉 아르헨티나 재정적자 변화 추이



출처: IDESA, <http://www.idesa.org/informes/1388>

의 재정적자는 GDP의 6.7%에 달했다.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공공부문 재정적자는 GDP의 4.1%였으나, 중앙은행 자산과 사회보장국에서 이동한 자금(GDP의 2.6%)을 포함시킬 경우 재정적자는 6.7%에 달한다(〈그림4〉). 이러한 수치는 2001년 경제위기 때보다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현재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3.7%), 스페인(3.4%), 이탈리아(3.7%)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지방정부와 기초단체의 상황은 중앙정부보다 더욱 심각하다.²¹⁾ 늘어나는 재

21) 2004년부터 2014년 사이 중앙정부의 세수는 GDP의 18%에서 26%로 증가했다. 그러나 세수 증가분

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2006년부터 중앙은행의 자산과 사회보장기금을 사용했으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재원 및 보조금을 조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정부는 화폐발행을 통해서 재정적자를 보전했고, 이는 연간 25%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되었다.

따라서 마크리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의 핵심은 공공지출 축소에 있다. 2004년부터 2014년 사이 정부의 세수는 GDP 대비 8% 증가했다. 반면 재정지출은 GDP 대비 1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 2%, 사회보장성 지출 4%, 경제보조금(에너지, 교통, 공기업) 4%이다.

연금의 수혜범위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연금수령자 40만 명이 늘어났고, 연금지출도 연 45% 증가했다.²²⁾ 그러나 연금 인상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긴축은 현실상 어렵고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감축도 빈곤계층의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급진적인 긴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조직 감축, 공기업의 수익성 향상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을 통한 경제 보조금 삭감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의 숫자는 키르츠네르주의 12년간 22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현재 인구의 약 10%가 공무원인 셈이다. 이들 가운데 2만 4천 명은 2015년에 계약되었으며, 전체 공무원의 5.7%는 출근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 유령 노동자, 즉 뇨키(ñoqui)이다²³⁾. 마크리는 경제침체의 원인을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비효율적이

의 단지 27%(GDP의 2%)만 지방정부로 이전되었다. 나머지 73%, 즉 GDP의 6%는 중앙정부가 독점했다. 지방정부와 시정부는 교육, 공공의료, 치안, 인프라, 주거서비스 등을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과 중앙의 공적자원 분배의 불균형 문제는 세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불만과 저항의 원인이 되었다(<http://www.widesa.org/informes/1177>).

22) La Nación, 2015. 7. 9. (<http://www.lanacion.com.ar/1800053-insostenible-desborde-del-gasto-publico>).

23) La Nación, 2015년 12월 22일(<http://www.lanacion.com.ar/1856411-noquis-en-el-estado-hay-4-millones-de-empleados-publicos-de-los-cuales-entre-el-5-y-7-serian-fantasma>).

고 비대한 정부조직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5,491명을 해고했으며, 전체 공무원의 0.8%에 달하는 3만 명의 해고 계획을 발표했다.²⁴⁾ 그리고 만성 적자의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에는 기업가 출신의 CEO를 임명하여 공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공직사회와 공무원노조 그리고 일반 노조는 대규모 집회와 파업으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마크리 정부의 재정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전 키르츠네르주의 시기에 비대해진 정부부문 축소와 정부보조금 삭감을 통한 정부의 지출을 줄여야만 하지만, 고용불안, 구매력 저하, 물가상승 등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이다.

3) 경제침체

중국발 호황에 편승하여 고공 성장하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정부의 과도한 보호정책과 규제로 기업 활동과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서 2013년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그림5〉). 가장 큰 문제는 외환보유고이다. 해외에서 자본조달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출을 통한 외환유입이 가장 중요한 외화소득원이나 무역수지가 불균형해지면서 외환보유고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외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환규제정책과 수입규제정책을 시행했으나, 오히려 폐소화의 가치 폭락과 물가인상에 영향을 미쳐 수출경쟁력을 악화하고 경제침체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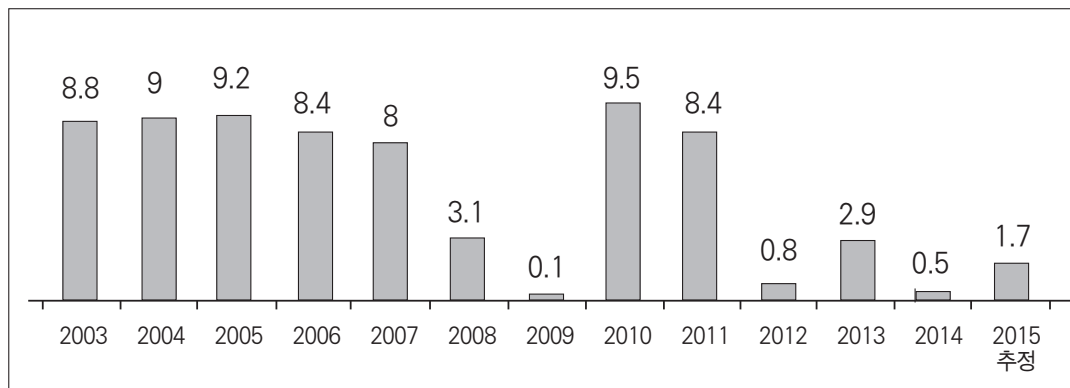
키르츠네르주의 정부가 외환보유량을 증가시켜 경제위기를 모면하고자 시행

24) *Perfil*, 2016년 3월 1일(<http://www.perfil.com/politica/Distribuyen-un-instructivo-para-despedir-empleados-publicos-20160117-0022.html>).

한 외환규제정책(cepo)은 기업의 국외 송금뿐 아니라 개인의 여행목적 달러 구매와 해외신용카드사용도 통제했다.²⁵⁾ 이로 인해 달러화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암시장에서 달러 거래가 증가했고,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 간의 격차가 최고 50% 이상 벌어졌다. 이와 함께 정부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높은 물가상승을 초래하면서 폐소화 가치가 하락하자 기업은 물론 개인들도 폐소화보다는 달러화를 선호하면서 암거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외환규제정책과 함께 외환보전을 위해 시행하던 사전수입신고제도(DJAI) 역시 경제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사전수입신고제도는 수입을 위해서 수입대금 결제 시 유출되는 외환과 동등한 금액만큼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비록 무역수지 회복에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교역규모 및 해외투자 감소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높은 물가인상을 초래했다.

〈그림5〉 아르헨티나 GDP 성장률 추이



출처: KIEP

25) 수입 금액이 20만 달러를 넘는 경우 환전 시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일반 송금은 5,000달러 초과 시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사용과 관광목적의 달러 환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공식 환율에 비해 35% 높게 환율을 적용했다(KIEP, 2016).

아르헨티나는 재정수입의 1/4을 농축산물 수출을 통해서 거둬들인다. 그러나 키르츠네르주의 시기 증가하는 공적지출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²⁶⁾ 위해서 농산물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왔다.²⁷⁾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생산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출세가 생산자의 수익성을 낮추고, 수출업자의 수출 의욕이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과도한 수출세 부담으로 수출업자는 수출을 하지 않고 시장가격이 오를 때까지 창고에 보관했다. 정부는 비축된 농산물의 가치를 130억 달러로 추정했다.

마크리주의는 키르츠네르주의의 외환규제와 수입규제정책이 경제위기 극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취임 즉시 외환규제, 수입사전신고제 그리고 농산물 수출세(대두 제외)를 폐지했다. 2015년 12월 17일부터 외환규제를 철폐하고 환전을 자유화하여 공식 환율과 암거래환율 간의 격차를 좁혔다. 2016년 4월 29일 기준으로 공시환율은 달러당 14.5페소이고, 암시장 거래 환율은 달러당 14.6 페소로 조정됨으로써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약 40% 하락했다. 환전 시 사전 승인을 요구하던 제도가 철폐되어 기업은 200만 달러까지 자유롭게 달러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해외에서 신용카드사용 시 부과하던 35%의 세금도 폐지되었다. 다만 페소화 가치 폭락을 막기 위해 관리변동환율제(dirty float)를 운용하여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적정 수준에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페소화의 가치 하락으로 실질임금 하락과 물가상승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수출의 가격경쟁력은 상승했다.

농축산물 그리고 광물에 대한 수출세를 대부분 폐지하고 대두에 대해서만 수출세를 5% 인하했다. 수출세 인하가 발표되자, 수출업자들은 그동안 창고에 쌓

26) 수출세가 전체 조세수입의 10%를 차지한다.

27) 수출세율은 과일 및 채소 5%, 포도주 2.5%, 쇠고기 15%, 주요곡물 20% 이상이고, 특히 대두 38.5%, 대두유 35%로 높은 편이다.

아둔 곡물을 풀어 수출을 재개했다. 정부는 수출세 인하로 수출이 증가하면 외환 유입과 소득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체 농산물 수출세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대두에 대해서는 5% 인하와 점진적인 인하를 약속한 상태여서 농산물 수출세 폐지와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시장에 대한 마크리주의 경제정책 변화라는 상징적인 효과가 더욱 크다.

4) 여소야대

아르헨티나는 12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의회와 주정부는 여전히 키르츠네르파가 장악하고 있다. 현재 상원 72석 중 공화주의제안당은 4석, 승리를 위한 전선은 43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원 257석 중 공화주의제안당은 41석, 승리를 위한 전선은 117석을 차지하고 있다. 24개 주 중 15개 주의 주지사가 페론주의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다른 야당과 연합을 꾀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리는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하겠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페론주의 세력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마크리 대통령의 임기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키르츠네르주의는 비록 분열로 대권을 내줬지만, 여전히 강력한 정치세력이며, 아르헨티나의 가장 중요한 정치세력인 노조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재정긴축과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질소득 감소와 실업에 대한 노조의 반발과 저항은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여소야대의 국면을 극복할 것인지가 마크리주의의 가장 큰 과제이다.

IV. 아르헨티나 우파로의 전망과 향후 과제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초로 집권에 성공한 제3의 세력인 마크리주의는 키르츠네르주의가 남겨놓은 유산 위에서 경제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자유주의 우파 성향의 마크리는 경제정책의 변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아르헨티나 국민은 변화에 손을 들어 주었다. 마크리의 승리로 인해 아르헨티나는 또다시 자유주의 시장경제 중심의 정책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좌파정권에서 소외된 기업과 자본 그리고 미국의 월가는 마크리주의의 등장을 환영하고 있다.

국내와 해외언론은 이번 마크리주의의 승리를 키르츠네르주의의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인한 재정파탄의 결과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경제문제는 국제 원자재 시장과 중국 경제가 활황이던 시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문제는 무역수지 불균형으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면서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다. 외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키르츠네르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국민은 좌가 아닌 우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1990년대 무분별한 개방정책으로 국가 파탄의 위기를 경험한 아르헨티나는 변화를 원하지만 한편에서는 시장개방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개혁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물가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마크리 정부로서는 물가인상이 개혁의 큰 부담이다. 비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은 40%에 달한다고 한다. 경제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이 늘지 않으면 사회적 저항은 클 수밖에 없고, 정치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마크리 정부로서는 국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미 마크리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갑작스러운 변화와 개혁의 충격으로 미처 준비되지 않은 사회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키르츠네르주의 12년간 사회적 지표의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

하고, 국가 전체의 경기가 활성화되었다. 수십 년간 정부 보조금과 노동자 우선 정책에 익숙해져 있는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마크리주의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국부의 증가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신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기업 활동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과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국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아르헨티나 국민은 이번 선거에서 키르츠네르주의의 복지정책을 심판한 것이 아니다. 단지 빈곤해진 경제적 상황 속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와 보호무역을 풀고 자본과 투자를 개방해야 하는데, 좌파정부는 불가능하므로 우파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줄어들어 생활이 예전보다 더 궁핍해진다면 아르헨티나 국민은 2001년과 같이 냄비를 두드리며 거리로 뛰쳐나와 ‘모두 물러가라’고 외칠 것이다. 우파 정부의 운명은 경제 회복에 달려 있다.

참고 문헌

- 박미숙.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과와 경제정책 전망”, KIEP file:///C:/Users/mofa/Downloads/%EC%98%A4%EC%84%B8%EA%B2%BD-%EC%A0%9C16-1%ED%98%B8.pdf
- 윤예찬. “아르헨티나 경제의 Not-So-Holy Trinity (1): 재정적자”, KOTRA.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35813&ARTICLE_SE=20301
- 윤예찬. “아르헨티나 경제의 Not-So-Holy Trinity(3): 외환부족”, KOTRA https://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all-all/overseamarket-detail.html?BBS_ID=10&MENU_CD=M10080&UPPER_MENU_CD=M10003&MENU_STEP=2&ARTICLE_ID=5035815
- Levitsky, Steven and Maria Victoria Murillo. 2008. “Argentina: from Kirchner to Kirchner”, *Journal of Democracy*, Vol. 19, 2, April.
- Sidicaro, Ricardo. 2011, “El partido peronista y los gobiernos kirchneristas“, *Nueva Sociedad*, No. 234, julio-agosto.
- Dabat Alejandro. 2012. “El rumbo de la economía argentina bajo el kirchnerismo”, *Economía UNAM*, Vol. 9, No. 26, mayo-agosto.
- Vommaro, Gabriel. 2014. “«Meterse en política»: la construcción de Pro y la renovación de la centroderecha argentina”, *Nueva Sociedad*, No. 254, noviembre-diciembre.

